

여수, 3만명 돔구장 품고 남해안 문화거점 도약하나

문체부 공모 돌입...전남광주·여수, 중규모 시설 유치
여수박람회장 7만2000㎡ 활용...스포츠·공연 연중 구상
민형배 시장 “공모 대응”...12월 선정·2034년 준공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시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3만명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유치에 나선다. 정부의 건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박람회장 활용의 돌파구를 찾고, 여수의 관광 기반을 대형 스포츠·공연 수요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제대회와 스포츠 경기, 공연 등을 연중 개최할 수 있는 시설로, 4만석 이상 대규모와 2만~4만석 중규모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는 이 가운데 중규모 시설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지는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부지

약 7만2000㎡다. 이곳에 3만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을 배치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해 경기·공연 관람부터 숙박·관광까지 이어지는 방문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의 돔구장 구상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논의에서 출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며 같은 해 10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 당초 K팝 전용 아레나를 중심으로 검토하던 사업은 정부 논의에 맞춰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함께 개최하는 복합 돔구장으로 방향을 넓혔다. 시도 담당 부서를 문화예술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바꾸고 문체부와 국회 등에 유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내년도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국비 5억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돔구장 배치와 주변 공간 연계 등 구체적인 조성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와 여수시는 돔구장 건립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새로 물색하는 대신 기존 박람회장 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치른 공간에 상시 집객시설을 도입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근거다. 박람회장과 가까운 KTX 여수엑스포역, 공항과 크루즈터미널 등 교통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수엑스포역은 지난달 복합환승센터 국가계획에 반영돼 향후 교통수단 간 연계와 방문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다. 기존 관광자원에 대형 경기·공연을 더하면 관람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숙박·외식 등 지역 소비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유치 구상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화여건 개선 방안으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이 제시됐으며, 이 대통령은 수요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문갑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모 대응과 운영 문제를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활용계획 타당성, 입지 적

정성, 사업 실현성 및 기대효과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기관은 이달 28일까지 유치의향서, 12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2월 9~14일 서면평가, 17~28일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연말에 선정 결과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준공 목표는 2034년이다. 통합시가 당초 구상한 2027~2031년 사업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2027년 상반기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되며, 총사업비와 세부 건립계획도 이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광주소방본부, 복합재난 가정 긴급구조 종합훈련 1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선평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소방대원들이 대형 화재와 건물 붕괴,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교육연구시설 대형 화재, 건축물 붕괴,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에 진행했으며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무안 국가산단, 101개 기업 유치·입주협약 추진

산업용지 52% 투자 수요 확보...연내 LH 사업시행자 지정 목표
반도체·물류·AI 농산업 기업 유치...군공항 이전 1조 지원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무안국제공항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 입주 수요 확보와 사업시행자 지정에 나선다. 산업용지 절반기량에 대한 투자·입주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특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정절문 사전 답변서에 따르면 무안 국가산단은 무안군 현경면 일원에 7615억원을 투입해 347만㎡ (10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도체와 물류, 신재생에너지, K푸드 융복합, 인공지능(AI) 첨단 농업 산업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101개 기업과 투자·입주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대

상 용지는 33만평으로, 전체 산업용지 63만평의 약 52%에 해당한다. 통합시는 앵커기업 등 입주의향 기업을 추가 발굴해 나머지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도 확보할 방침이다. 산단 지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8월 6일 국가산단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25일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도 지난 1일 산단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지분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무안지역의 주요 현안인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군 1조원 지원 방침을 유지하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경우 개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전부지 개발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무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규모와 목록은 무안군수가 참여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통합시는 이를 위해 무안군과 매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오는 11월 이전부지 확

정을 시작으로 2027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2028년 6월 군시설 공사 착수를 거쳐 2032년 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한 만큼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종전부지의 반도체 산단 조성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8년 준공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가지로 임시 분산 배치하고, 신공항 준공 전에 종전부지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무안공항은 2027년 하반기까지 할주로 보수·보강 등을 마친 뒤 재개항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시, 국무회의 건의 등 사업 추진 요청 방안 검토

▶1면에서 현재 건의안은 총연장 28.77km, 사업비 1조7868억원이다. 수정한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사업 타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광주 인접 지역의 생활권 연결이 경제성 면에서 걸려 있다면, 서부권 산업축은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7월 건의한 광주~영광 신산업선은 43.7km, 1조9000억원 규모로 광주와 서부권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제5차 계획에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목포~군산 서해안선도 제4차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된 이후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110km 구간에 4조7900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으로, 서남권 철도축을 보완할 사업이지만 후속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가계획 반영과 법적 근거 확보만으로 사업 속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광주~대구 198.8km를 잇는 달빛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2024년 1월에는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를 요구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선마다 지연 사유는 다르지만 통합시가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정부 절

차에 묶여 있다는 점은 같다. 통합시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질이 빛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국무회의 건의 등 사업 추진을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차령 철도 개통 시점을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0분 생활권을 철도 건설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부 협의와 별개로 현재 운영하는 버스의 연결성을 높이고 환승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지역 교통정책의 과제로 제시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광주 중심의 방사형 교통망을 보완해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태웅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교육·행정 등 권역 내 생활거점은 30분, 권역 간 이동은 60분 안에 가능하도록 간선교통축을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단기 대책은 시외버스의 광역간선버스 전환과 환승요금제 도입이다. 철도가 없는 구간의 이동을 버스로 보완하고 도시철도·시내버스의 환승 부담을 낮춰 생활거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전격전’...전남광주 부지확보 총력

신공항 환경평가 기준 확정
행정절차 60일 단축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격전에 맞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행정 절차를 압축해 나가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달 중 신 군공항 설립과 관련된 3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새로운 군공항의 규모 등을 수립하는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남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규격을 공고한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 신 군공항 전략 및 환경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확정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소음·진동, 자연환경, 대기관리,

해양, 수질관리, 토양환경 등을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신공항 기본계획의 감리 성격으로, 향후 절차와 추후 정부와 군공항 설립 관련 협의를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최종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 미리 준비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한 용역 발주 후 과제를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